

“대형공사 공구분할 등 지역사 건설물량 확보 절실”

“지역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건설물량 확보와 수익성 제고입니다.”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건설업 경기가 어려워질 수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제여건이나 국가 재정 추세로 보면 예전과 같은 공사물량 확대나 건설경기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한된 공사물량 내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에 대한 공구분할 등을 통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역서상 단가나 노무비 등 제경비를 낮추거나 인력 투입량을 삭감하는 등 품셈 기준을 축소 적용해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해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금액이 삭감됐음에도 기초금액 결정과 입찰 과정을 통해 건설사들은 더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여전히 시공 단가와 괴리가 있는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관련 규정대로 발주하는 것은 물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고정된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건설업체의 업역을 침해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를 개선하고, 건



중소업체, 제값 받고 시공하는 여건 조성 위한 제도개선 시급

노후 인프라 체계적 관리 위해 국가차원 입법화도 필요

설업계의 끊임없는 분쟁과 소모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대공사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할 일로 SOC(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꼽았다.

그는 “건설산업은 국가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으로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고용 및 투자, 소비촉진 효과가 크다”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새 정부가 SOC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SOC 시설물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어서 잠재적 안전사고 가능성이 내재돼 있는 실정이라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김 회장은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등의 입법화뿐만 아니라 지역 관련 조례의 정비 및 제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정책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후 및 안전관련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연재해 방지시설 △주거환경 개선 △나후된 도로 등의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당위성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현재 위기를 맞은 국내 건설시장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국내 건설시장은 과거와 같이 대량의 인프라 또는 건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정부의 역할 축소에 따른 공공시장 위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여기에 민간 건설시장 역시 고령화와 1인가구 확대, 장기적인 인구 감소 가능성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사회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재해 예방 같은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미기자 boomi